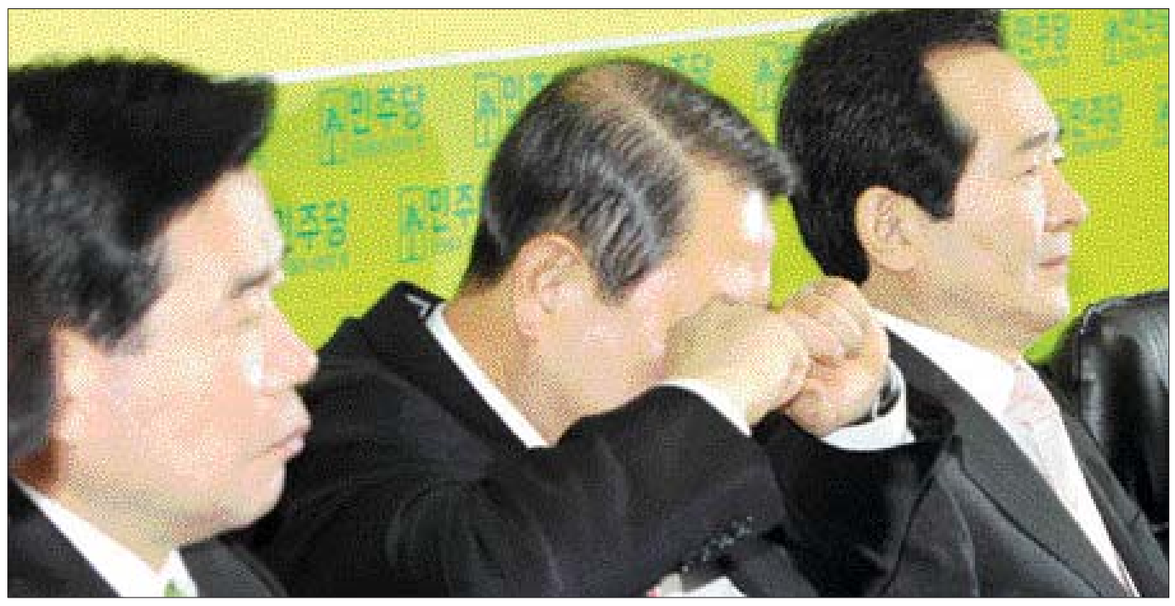
광주發 지방선거 바람몰이 이미 물 건너갔다



지난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주선, 김진표 최고위원(오른쪽부터). 민주당은 이날 밤 박주선 최고위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 경선에 시민배심원제 50% 적용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① 왜 밀어붙였나 "밀리면 끝장" 주류 주도권 잡기

광주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50%나 반영된 배경에는 혁신 공천 동력 확보라는 명분과 당내 주도권 경쟁 등이 복잡하게 얽힌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정 정도의 반발이 있더라도 결국 광주시장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오만하고 안이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밀어붙인 배경은 '동력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선거 혁신 공천 방법으로 내세운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정치적 상징성이 큰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좌초할 경우, 타 지역으로 확대할 동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류 측 관계자는 "만약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무산된다면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 등 타 지역에 도입할 명분을 잃게 된다"며 "호남의 중심인 광주시장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성공한다면 전체적인 지방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 전력이 있는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 허용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무산된다면 '리더십 부재'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 지도부가 막판 밀어붙이기에 나선 배경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의 역학관계도 광주시장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동영 의원 등 당내 비주류 측에서 광주시장 후보 선정 방법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무산된다는 것은 당내 역학관계상 주류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주류측 일부 386 의원들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논란과 관련, '지도부 책임론' 등을 거론하면서 압박한 것도 민주당 지도부의 등을 떠민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광주 국회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지도부를 압박하기 보다는 오히려 막판에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일부 광주 국회의원들이 내부적으로 민주당 주류 측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밀어붙인 가장 큰 배경은 소위 '광주 텃밭론' 이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있더라도 광주시장은 결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안이하고도 오만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시도지사 경선 일정

일정	지역	비고
3. 12(금)	충남	안희정 공천 확정
	충북	이시종 공천 확정
3. 27(토)	대전	시민배심원제(50%)+당원 전수조사(50%)
4. 4(일)	경기	국민참여 경선
4. 10(토)	광주	시민배심원제50%+α(50%)
4. 11(일)	전북/제주	국민참여 경선
4. 17(토)	전남	국민참여 경선
4. 18(일)	인천	미정
4. 24(토)	강원/영남	미정
4. 25(일)	서울	미정

② 흥행 성공할까 단체장 손보기용 전략 개혁 퇴색

민주당 주류 측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고집했던 이유는 광주에서 개혁공천 바람을 일으킨 뒤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 지방선거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 때문이었다.

따라서 3월 초·중순에는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을 실시, 이어 벌어지는 다른 지역에서 경선 바람몰이(붐업)를 계속해야 했다. 이는 지방선거 기초전략을 마련했던 혁신과 통합위원회, 즉 민주당 주류 측이 누차 강조했던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류 측의 생각은 이미 틀어진지 오래다.

우선 호남경선 실시 시기가 애초 계획했던 3월초·중반에서 광주 4월10일, 전남 4월17일로 각각 연기되면서 '붐업' 전략 자체가 효과를 보기 어렵게 됐다. 그나마 서울시장 경선이 4월25일자로 잡혀 있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미 광주·전남에서 '생채기'가 심하게 난 상태일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지방자치선거라는 점에서 시민배심원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게 일반적 분석이다.

또 '개혁'이란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광주시장 후보를 외지인이 선출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광주시민 사이에서 확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주선 최고위원은 14일 "광주는 한국 민주화의 상징이고 과거 '노무현 경선 신화'의 진원지이다"며 "이런 광주시민의 역량을 무시하고 외지인에게 시장 후보 선출을 맡긴다는 것은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회의원 '입맛'에 맞지 않은 기초단체장 손보기 용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개혁공천 이미지는 이미 퇴색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지역정치권에서는 광주 북구와 여수·순천·광양 등이 도입지역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정적(政敵)이자 사이가 좋지 않은 기초단체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지도부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미 예고됐다는 지적이다.

현역 단체장이 비리가 있거나 현저하게 행정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등의 객관적 기준이 없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 지도부가 임의대로 선택, 비판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현역 단체장의 탈당이 시작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비상에 걸려 탈당 가능성이 엿보이는 단체장 설득에 나섰다. 조만간 강기정 의원이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을, 김성곤 의원이 오현섭 여수시장을 각각 만나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③ 후보들 셈법은 여론조사 뒤져도 뒤집기 가능

14일 현재 광주시장선거 출마가 확실시되는 민주당 후보는 박광태 광주시장, 강운태·이용섭 의원,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양형일 전 의원 등 6명.

이중 시민 배심원제 도입으로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후보는 강운태 의원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우위를 점해 왔는데 이 기득권이 일정 부분 상실된 때문이다. 비록 현지 배심원 평가가 남아있고 나머지 50%에 시민여론조사가 일부 반영될 수 있지만 그 비중이 애초 예상보다 적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강 의원은 그동안 경선방식을 완전국민경선 또는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시민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었다. 하지만, 강 의원 측 관계자는 "시민배심원제 50% 이외에 나머지 50%가 어떻게 결정되는 지를 본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반기는 기색이다.

우선 박광태 시장 측은 "당 입장을 존중하며 따르겠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제가 그다지 손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섭 의원과 정동영·양형일 예비후보 측도 애초 예상보다 시민배심원제 배점 비율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구도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갑길 예비후보도 "중앙당의 공천방식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물론, 시민배심원제도 50% 이외에 중앙당 공심위가 나머지 50% 반영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변수다. 당원투표와 시민여론조사 비율에 따라 후보마다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원투표 비중이 클 경우 그동안 당원 관리를 잘 해온 후보에게는 큰 이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명의 후보 중 광주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재선인 박광태 시장이 우대당원을 가장 많이 확보했을 것이라는 게 각 후보진영의 공통된 분석이다. 때문에 박 시장은 중앙당의 최종 경선방법 결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 전수조사에서 강 의원도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박 시장의 당원 장악력 못지 않게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의 영향력도 막강해 오히려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밀어주는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후보 간의 합종연횡에 따른 '당원 밀어주기'도 경선판도를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

김동철 시당위원장이 50%안 수용?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50% 반영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이 행보가 논란이다.

지난 12일 저녁 이뤄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대표가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반대하는 박주선 최고위원에게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도 시민공천배심원제 50%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압박에 나선 것.

정 대표의 역공으로 그렇지 않아도 홀로 싸우고 있던 박주선 최고위원의 '원칙론'도 점차 힘을 잃으면서 결국, 이날 최고위에서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50% 반영안이 통과됐다.

김동철 시당위원장은 "당초 100% 시민공천배심원제로 광주시장 후보를 선정한다고 해서 강력 반대했었다"며 "그러나 지도부가 50%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언제까지 평행선을 달릴 수 없다는 점에서 중재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